

김해신공항 ‘부적격’ ‘가덕도신공항’ 속도

안전성·운영·수요·환경·소음 등 김해신공항, 상당부분 보완 필요
여권, 김해신공항 백지화 전제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추진나서

정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됐던 김해신공항이 4년여 만에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가덕도신공항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위원장 김수삼)가 17일 밝힌 검증 결과를 보면, 김해신공항은 안전성은 물론 시설 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삼 위원장은 이날 11개월에 걸친 검증결과를 발표하며 “검증과정에서 비행 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 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 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협의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법제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부 추측이나 오해가 있기도 했으나, 최종보고서로써 답한다는 입장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면서 “검증 결과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검증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린 결과에 대해 정부와 부울경, 국민 여러분께서 최대한 존중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해신공항 사업의 백



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이날 검증 결과 발표 직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부산시민의 간절한 여망이 만들어낸 쾌거이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 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산업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가덕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되면서 유일한 대안인 가덕 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가덕 신공항 추진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덕 신공항 추진은 우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공항 건설은 국토부나 국토부가 지정한 사업자가 추진할 수 있고, 국토부 협조 없이는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사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김치 맛 유지 ‘과냉각 저장기술’ 개발

농진청, 수출·소비 증가 기대

농촌진흥청은 김치 수출과 소비에 도움이 되도록 갖 담긴 김치 맛을 오래 유지하는 김치 과냉각 저장기술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은 지난해 기준 10억 5000만 달러로 2018년보다 7.7% 증가했다. 또한, 일본에 편중되었던 수출국도 최근에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배에 실려 현지에 도착하기까지 20~40일이 경과되고, 이 기간 동안 발효가 계속돼 지나치게 익은 상태가 된다.

수출업체에서는 김치의 발효를 지연시키기 위해 식용항균제 등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저장연

장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김치 저장온도를 낮추면 발효가 지연되는 점에 착안해 어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얼지 않은 상태로 저장하는 과냉각 저장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일반 김치냉장고 형태인 직냉식 냉장고는 냉매가 흐르는 부분이 다른 곳보다 더 차가워 성애가 발생한다. 그러나 과냉각 저장은 냉장고 내부 모든 부위의 온도 편차가 적어야 효과적이므로, 단열재와 전도체를 냉장고 내부에 배치해 목표 온도 이내의 온도 편차가 유지되도록 했다.

이 기술을 일반 포기김치에 적용한 결과, 잘 익은 상태의 산도인 0.6%에 도달하는 기간이 1도(℃)에서 3주가 소요됐으나 -2.5도에서는 12주가 소요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부산항 제2신항 ‘한국형 스마트 항만’ 조성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전략 전국 14개 항만 권역별 특화 개발

부산항 제2신항 오는 2022년 착공 건의 수용, 명칭 ‘진해신항’ 변경

정부가 2030년까지 부산항 제2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하고, 총물동량 기준 세계 11위인 광양항은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구축하는 등 전국 14개 항만을 권역별로 특화해 개발한다. 이를 통해 총물동량 19억6000만톤, 생산 유발 83조원, 부가가치 유발 28조 원,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우선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5940억 원을 투입,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를 구축,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기로 했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의 협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지난 13일 부산항 신항 부두에 접안한 컨테이너선에서 분주하게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해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Global Supply Chain)’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을 2022년에 착공한다. 부산항 제2신항은 특히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산화하고, 영도구 정확동 배후지 안전 확보를 위해 1.3km 구간의 재해방지시설도 반영했다.

총물동량 기준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해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항내 선박통항의 효율성·안전성을 높이는 통항안전시스템인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 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킨’ 부두를 확충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km)로 조성해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여객·크루즈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하고, 새만금항은 2022년 접화부두(2선석)를 착공해 2025년 완공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수처·공정경제 3법 등 연내 마무리 할 것”

더민주 이낙연, 관훈토론 기조연설 “주요 민생·미래 입법 등도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처리 같은 개혁 과제를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차질 없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요 민생·미래 입법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4·15일 총선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면서 그만큼의 책임도 맡겨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출범이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여야 입장차가 여전함에도 이 대표가 법안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일정을 두고 “내일(18일)까지 후보를 내주시길 바란다”며 촉구하기도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지난 1~2차 회의에서 결론 내지 못한 데 대해 비판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법사위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있다”며 야당 측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당내 열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열성 지지층이 당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와 관련 이 대표는 “그분들도 같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들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팬덤 정치를 얘기하는 언론 보도를 보며 모순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미국 대선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열성 지지자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면서 바이든 당선자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언론 보도를 보면서 혼자 웃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우선 이번 일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마치 두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비치는 것은 몹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지, 정치적 중립성이나 검찰권 남용에 시비를 받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 장관은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등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 윤 총장이 그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결정을 두고 “정치 혁신 명분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송구스럽다”며 “저나 민주당이 비판 받더라도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이 더 나은 게 아닐까 해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당내에 윤리감찰단을 만들어 비위 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주택자 문제를 정리했다. 윤리신고센터와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개설해 부정 부패와 성 비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2020 더혁신위를 만들어 중장기 정치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에 맞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대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할 신(新) 복지체제 연구단도 활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